

저출산/불임

Low Fertility & Infertility

김영심(Young Shim Kim)¹⁾황혜신(Hae Shin Hwang)²⁾황혜정(Hye Jung Hwang)³⁾

ABSTRACT

Recently, low birthrate has been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which is expressed as catastrophe of population.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low birth rate has occurred directly and indirectly, generating total economic and social burden for our society. That is, low birthrate should not be simply regarded as reduction of population.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e reasons of low birthrate and the current status of infertility, and examined practical and theoretical issues in terms of low birthrate. It is our contention that low birthrate and infert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governmental issue to enhance quality of life of the public. Thus, integrated and systematic policy must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effectively meet the issues.

Key Words : 저출산(low Fertility, low birthrate), 불임(sterility), 고령화(population aging).

I. 현 황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우려를 넘어 인구의 대재앙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6월 신생아 수는 3만 4200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800명(2.3%)이 줄었다.

출생아 수는 결혼 특수인 쌍춘년이었던 2006년 2월에 4.8%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인 뒤 2007년 황금돼지해를 거치면서 2008년 2월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3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급격한 하락세를 타고 있다(서울신문, 2009년 8월 25일). 이는 합계출산율을 통해서도

¹⁾ 한국사이버대학교 아동학부 부교수

²⁾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³⁾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ae Shin Hwang,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7 Hongji dong, Chongro gu, Seoul 110-743, Korea
E-mail : hshwang@smu.ac.kr

확인된다.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0세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 1974년에 3.81명, 1983명에 2.08명으로 하락해오다 2004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1.15명을 기록했다. 2005년에는 1.08명, 2006년에는 1.12명으로 떨어졌다가 2007년에 1.25명으로 소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2008년 다시 1.19명으로 감소해 곧 1.0으로 떨어질 전망이다(서울경제, 2009. 8. 13).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2명으로 19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반등되었지만 일본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예외였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구 센터가 1975년부터 2005년도까지 37개국의 인간개발지수(HDI, 최고치는 1.0)¹⁾와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이 산업화와 함께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사회발전수준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다시 출산율이 증가하는 반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여성이 일하는 환경이나 보육시설이 향상되어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인간개발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녀불평등이나 여성이 일하기 힘든 노동환경,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세계

일보, 2009. 8. 6).

그렇다면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은기수(2006)는 이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는 경제적 요인이다. 청년실업과 높은 실업률, 자녀 양육에 드는 보육비의 부담, 교육(특히 사교육)에 들어가는 높은 교육비, 높은 부동산 가격 등은 저출산을 야기하는 경제적 요인이다. 두 번째로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들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직업을 갖는 여성이 늘어나고 여성들이 경제적 능력과 독립성을 갖게 되면서 결혼이나 출산 관련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젊은 층에서 결혼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간출산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요인으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중심의 전통적 가치체계를 들 수 있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족가치관 및 남성중심적 가치관은 여성들의 지위 상승이라는 현실과 충돌하여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일을 선택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의 원인을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 불임, 양육비 증가 등의 직접적인 요인과 개인주의 가치관 및 자녀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증진 등의 간접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장진경, 2005). 직접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임신 할 수 있는 가임기간이 단축되고 불임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어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 초혼연령의 상승 측면에서 볼 때도 과거에는 결혼하는 사람의 과반수가 20~24세에 속했던 것이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25~29세로 변화하였으며 30~34세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임기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1) 인간개발지수 : 유엔개발계획이 매년 1인당의 국내총생산(GDP)이나 평균수명, 문맹퇴치율, 취학률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지수로 각국의 삶의 질과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있다. 또한 2003년 이후 증가하던 혼인이 5년 만에 감소로 반전되어 2008년 혼인은 327,715건이었으며 전년보다 15,844건(4.6%) 감소하였다. 반면에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히 증가하여 남자가 31.4세, 여자가 28.3세로 전년보다 각각 0.3세, 0.2세 증가하였다. 한편 이혼율의 증가로 여성이 가임 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출산을 급락과 더불어 이혼율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이혼건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카드대란이 일어났던 2003년에 각각 27%와 15%로 급증하였는데 금융위기로 이 흐름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경제, 2009. 8. 9).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임도 저출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임이란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거나 생존아를 출산할 수 있는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황나미, 2003). 가임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25-29세 기혼 여성의 불임비율이 13.5%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5-2007년 3년간 불임치료의 마지막 수단으로 체외인공수정을 시도한 부부는 연평균 55,000여명으로 지난해 신혼부부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9. 6. 15 양정선(2009)에서 재인용). 연령별로도 30대의 경우 81,818명(2004년)에서 115,589명(2008년)으로 41.3% 증가하였고, 20대는 8.5%, 40대는 19.3%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6년부터 불임 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는 저출산 저하를 막기 위하여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부부에게 체외수

정시술(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시술비를 1인 3회 한도액 4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의 법적혼인 불임부부로서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한다(헤럴드경제, 2009. 8. 13).

마지막으로 저출산의 직접 요인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확대되고 경제적으로도 맞벌이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실제적으로 저출산을 야기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혼이나 자녀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결혼과 더불어 자녀를 낳았을 경우 양육의 문제는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 더 이상 조부모는 자녀양육의 대안이 아니며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영아를 둔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이를 미루다 결국은 무자녀가족을 이루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필요한 양육비 및 교육비도 많은 부담이 된다.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이에 따라 경쟁적으로 자녀를 더 잘 키우려는 부모의 노력은 과도한 양육비의 지출을 야기한다.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자녀양육의 부담에서 또 다시 교육비(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손승영(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용과 교육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높고 그것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서울시 산하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에 사는 만 25-44세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

문'이라는 응답(28.1%)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정해서',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등 경제적 요인이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김경철, 2008).

저출산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가치관의 변화들을 들 수 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성인남녀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가능한 한 늦게 하려고 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을 보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혼 남녀들은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통적인 결혼 가치관으로부터 탈피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진경, 2005). 미혼과 기혼 남녀의 결혼관 및 자녀관을 비교한 연구(신효영·방은령, 2007)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생각은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 남성(77.2%)이 여성(66.3%)보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며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져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무자녀를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결혼률이 낮아지고 자발적 무자녀가 증가하면서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상의 직접적, 간접적 원인들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염려되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인구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산을 저하로 인해 총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며, 경제성장의 둔화되고,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된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로 인해 우리사회가 치러야 할 총체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심각해진다. 즉, 잠재성장률 하락, 생산성 감소, 노인 부양비 증가, 사회 제반 시스템 운영 문제 등 국가 경영 제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경제, 2009. 8. 13).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오영희 외, 2008)에 의하면 저출산은 인구고령화로 이어져 경제둔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지속 현상은 앞으로 20년 후 신규 노동력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고령화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 성장률을 좌우하는 3대 요소는 생산성 증가율을 비롯해 노동투입 증가율과 자본투입 증가율로 이루어지는데,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인구증가는 각각 노동투입량과 생산성 증대에 악영향을 끼친다. 통계청의 인구 예측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6년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정점인 3,619만 명에 도달한 뒤 감소하기 시작해 6년 후에는 140만명이 감소한다, 주력 생산부대인 30-40대 인구는 2006년(1,675명)에 이미 피크에 도달해 2018년에는 1,523명, 2022년에는 1,426만 명으로 급속히 떨어진다(서울경제, 2009. 8. 3).

이와 같은 인구감소는 구조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에는 인구감소에 따라 학교와 교사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과잉 공급된 학교와 교사의 경우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국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국가 평

균보다 높다는 점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질 좋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과 10여년 후면 상황은 달라진다. 또한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 가능인구(15~64)도 역시 줄어들고 이는 곧 세수 부족으로 직결되며 다가온 베이비 붐 세대의 조기 은퇴로 세수 부족 현상이 가속화 된다. 결국 생산가능 인구에서 빠지는 인구는 많은 반면 유입되는 인구는 적고 유입 인구의 연봉 역시 은퇴세대보다 적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근로와 납세의 폐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경제, 2009. 8. 12).

또한 저출산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아직까지는 연금을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지만 58년생을 시작으로 10여년 후 연금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대 초반이면 연금 가입자에게 주는 돈이 보험료 수익을 초과하기 시작한다. 2044년이면 연금 보험료보다 연금 급여 지출액이 많아지며 2060년이면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데,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10년의 합계 출산율을 1.15로, 2030년 이후를 1.28로 잡고 있는데 벌써 출산율 1.0 붕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서울경제, 2009. 8. 10).

II. 연구쟁점

저출산/불임 주제는 아동학의 다른 영역들과는 차별화된 연구방향 및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의 많은 분야들은 발달이론적 맥락과 근거 하에 아동의 발달이나 환경에 초점

을 두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저출산/불임의 주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된 분야이다. 불과 30여년 전만해도 인류는 인구의 지나친 팽창을 우려했으며 “돌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로 대변될 만큼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국가와 인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것이 10여년 전부터 인구가 적어지는 것을 걱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인류의 대재앙이라고까지 일컬으며 저출산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해결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2007년에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이삼식 외, 2007)가 시작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전담하거나 가족이 전담해 왔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분담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육을 경제적 지원(비용), 일-가정 양립(시간), 보육(서비스)으로 범주화 하여 보고 있다. 우선 경제적 지원(비용)에서는, 아동수당과 교육수당 등 수당방식과 양육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세금 감면의 조세방식, 자녀의 보건의료관련 건강보험 확대의 보험방식은 그 재원 마련과 운영주체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시간)에 있어서는,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기 위한 부모휴가의 활성화, 노동형태 유연화, 육아 후 시장복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는 국가가 제도화하고 있으나 시장의 실천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공보육 구현은 국가의 주된 역할임을

강조하며 보육서비스 질 수준 향상은 국가와 지방당국의 주된 역할이고 시민사회는 이를 견제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가족의 양육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는 결혼과 출산의 연기 또는 축소로 이어져 초저출산 현상을 야기할지도 모른다고 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오영희 외, 2008). 출산율의 저하 없이 출산과 노동이 병행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이 노동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노동과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고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축소하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취업과 승진, 일자리 유지 등 법적인 보호장치를 개발하고, 충분한 무상 보육시설의 운영과 유급 휴가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동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야 하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모색해야 하고, 출산과 양육,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저출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기관이나 정부출현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보건·의료적 등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학제간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현안 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출산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시작단계이나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는 이유와 문제점, 그에 따른 대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학문분야에서의 통합적인 연구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요구된다.

Ⅲ 실제적, 정책적 이슈

저출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OECD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을 두고 여유 있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에 대비하고 적응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다각적인 교육정책 노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행·재정적인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오영희 외, 2008).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저출산의 현상은 가속화되는 반면에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시작단계에 불과해 아직도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출산 대책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의 한 연구를 보면 여성들의 출산 의사는 높으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출산을 미루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여성신문, 2009. 8. 7).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4%가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5.4%에 그쳤다. 현재 또는 미래에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은 전체의 54.2%에 달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 의사 자체가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출산 의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임신, 출산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 중 사회 경제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12명과 민간전문가 12명을 위원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와 함께 12개 관련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부내에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정책과 세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조남훈, 2006).

또한 지난 2006년 8월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년에서 1963년 출생)가 노인연령에 도달하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 이후 출생)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 고령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사회,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증폭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작성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지침에 따라 관내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마지플랜2010』의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라는 비전아래 2006~2010년까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011~2020년까지는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첫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친화와 양성평등의 사회문화를 조성한다. 둘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 및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여성 및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족의 육아 및 노인부양 기능의 약화,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미흡,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기반 약화,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를 위기로인하고 보고 있으며, 반면에 청년층의 평균 자녀수가 인구대체 유지 수준(2.1명)에서 유지된다는 점과,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욕구가 증대하고, 양성평등 가치관이 확산 된다는 점을 기회요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정책과제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5년도부터이며 그 정책은 셋째아, 둘째아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영유아보육, 교육재정을 증액하고, 증액된 재정은 주로 보육료, 교육비로 지원을 하며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양육비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지속적인 육아지원 재정 확대 결과, 육아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또는 소외계층 아동대상에 대한 차등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은 2002년 19만 6천명에서 2005년에는 57만 1천명으로 3.3배가 증가되었다(오영희 외, 2008). 그러나 이와 같이 막대한 국가적인 유아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육아정책 수요자들의 재정지원 증가에 상응하는 정책만족을 체감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출산률 회복을 위한 과제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으로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정책은 한 가지 영역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성, 가족, 보육, 교육, 고용, 경제, 사회복지 등 여러 영역의 연계성 속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산·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장혜경, 2006). 많은 부부가 자녀를 낳아 기르기를 희망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출산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의 불안정, 보육·교육비 등 양육비용의 증가, 보육인프라의 부족, 양성평등적 문화의 비정착,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보호체계 미흡 등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여러 정책과 이에 대한 연구들(김경철, 2008; 이삼식 외, 2007; 장혜경, 2006)을 토대로 저출산 대응정책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방과후 학교 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직장생활과 육아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일도 필요하다. OECD는 출산율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세금감면 등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김경철, 2008).

둘째,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육아지원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을 늘리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

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 보육 및 교육 체제를 확립하여 모든 영유아와 양육가정에 균등한 기회를 주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연계된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으며 교육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리적이고 평준화된 이용비용을 부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교육 강화는 국가수준의 평가체제를 통한 질 관리를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해줄 것이다.

셋째, 임신에 대한 지원으로 불임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적극적인 임신과 출산의 의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임정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불임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된 지금, 불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마련은 출산을 원하는 대상자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고, 저출산 시대의 대안으로 필요한 전략이다(황나미,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임치료 부담이 가정경제에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3.2%였으며 불임치료를 중단하는 사유 중 26.6%가 비용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선, 2009). 그러나 현재 불임진단검사와 배란촉진 시술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인공수정부터는 보험적용 불가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불임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부가 적지 않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이혼 및 사별을 제외하고 생식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5-39세 유배우 가임여성 중 불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부는 전국 총 63만 5천 쌍으로 추계되고 있다(양정선, 2009). 앞에서 보았듯이 불임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불임치료의 성공률을 감안해볼 때,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 등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90일의 산전후 휴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중 사용자가 60일분을 부담해야 하므로 임신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근로형태를 유연화 하여, 부부가 함께 출산을 공유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출산과 육아 이후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의식의 변화와 가족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인구문제, 가족의 가치관, 양성평등의 이해를 돕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적 인식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부모가 믿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 대책 강화,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의 구축, 생활환경 상의 유해요인 차단,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고 주저하는 사회분위기가 감소할 것이다.

일곱째,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대체수준인 2.1명까지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검토하고, 다민족사회에 대비하여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하여 잘 적응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이를 자신과는 관계없는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노동인구의 부족을 야기해 결국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므로 저출산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여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경철(2008). 저출산사회의 교육정책 방안.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경제(2009. 8. 3). 인구대체양(2) : 저출산 복합불황이 온다. [http : //economy.hankooki.com/](http://economy.hankooki.com/)에서 2009년 8월 20일 인출.
- 서울경제(2009. 8. 9). 사상최악 ‘출산율 쇼크’ 온다. [http : //economy.hankooki.com/](http://economy.hankooki.com/).
- 서울경제(2009. 8. 10). 인구대체양(4) : 출산파업, 구명난 복지. [http : //economy.hankooki.com/](http://economy.hankooki.com/)에서 2009년 8월 20일 인출.

- 서울경제(2009. 8. 12). 인구대체양(5) : 국민 4대 의무 부도난다. [http : //economy.hankooki.com/](http://economy.hankooki.com/) 2009년 8월 20일 인출.
- 서울경제(2009. 8. 13). 저출산의 진정한 해법. [http : //economy.hankooki.com/](http://economy.hankooki.com/) 2009년 8월 20일 인출.
- 세계일보(2009. 8. 6). 선진국 출산율 반등... 한·일만 '예외'. [http : //www.segye.com/](http://www.segye.com/)2009년 8월 20일 인출.
- 손승영(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285-316.
- 신효영·방은령(2007). 미혼과 기혼 남녀의 결혼관 및 자녀관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494-495.
- 양정선(2009).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결혼장려및 불임부부 지원(이슈브리프 제15호). 수원 :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여성신문(2009. 8. 7). 2030 여성 54% '아이 낳고 싶다' [http : //www.womennews.co.kr/](http://www.womennews.co.kr/)2009년 8월 20일 인출.
- 오영희·박승희·구성열·김경철·이인재·이건직·권오정·김경래(2008). *저출산고령 사회관련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08-20-2).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은기수(2006). *결혼·출산 관련 가치관의 변화와 대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연구보고서 2006-22-7).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윤홍식·박종서·장보현·최은영(2007). *출산·양육 부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협동연구 2007-02-6).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 43(11), 165-183.
- 장혜경(2006). *출산·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연구보고서 2006-22-7).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남훈(2006). *인구정책의 개념과 발전 개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연구보고서 2006-22-7).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헤럴드경제(2009. 8. 13). 불임부부에 희망을... 서대문 시술비 지원. [http : //www.heraldbiz.com/](http://www.heraldbiz.com/)에서 2009년 8월 20일 인출
- 황나미(2003). *우리나라 불임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9년 8월 11일 투고, 2009년 11월 4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